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53
----------	------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의의원 : 김재용, 이태손  
하병문, 조정구  
권기훈, 박종필  
김정옥, 하중환  
김태우, 이동욱  
류종우의원(11명)

##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안 제4조의2)
- 다.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안 제4조의3)

## 3. 참고 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에”를 “한다) 및 50명 이상 사업장에”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 ----- ----- ---- <u>한다</u> ) 및 50명 이상 사업장에 ----- -----.
<u>&lt;신 설&gt;</u>	<u>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u>
	① <u>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u>

<신 설>

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  
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  
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  
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  
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  
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7. 11. 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7. 7. 26.,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7. 11. 28.>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 2017. 7. 2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8. 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7. 7. 26., 2020. 2. 18.>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6. 1. 12.,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7. 6.>